

사설

‘참회로 화합’ 불제자 답다

해인사 ‘세계최대’ 청동대불 조성 계획을 둘러싸고 빛어진 갈등이 실상사와 해인사 스님들의 참회 단식기도와 참회 용맹진진 다짐으로 여법하게 해결의 가닥을 잡아가고 있음을 보며 우리는 안도한다.

지난 한 달 여간의 양 사찰간 갈등 과정은 불쌍한 아니라 일반 국민들에게도 적지 않은 실망과 우려를 안겨 주었다. 비록 해인사 청동대불 조성에 대해 실상사 수경스님이 오해의 소지를 낳을수도 있는 방법으로 반대 의견을 밝혔다 할지라도, 해인사 일부 수좌스님들이 그 동안 조계종이 품어온 일익을 일으킬 때마다 대대적으로 등장했던 폭력으로 대응한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다. 더욱이 안거중 수좌가 선방을 박차고 나온 것은 큰 충격으로 받아들여졌다.

갈등의 해결 방법으로 불교의 참회 만한 것이 있리라.

21일간의 긴 단식기간을 잡고 단식참회에 들어가면서 해결의 물꼬를 건져 온 실상사 스님들은 ‘부처님 가르침 받들어 스스로의 허물을 씻어 내는데서부터 문제를 풀겠다’고 다짐했다. 여기에 해인사 대중들은 1주

일간 잠 한숨 자지 않고 정진하는 용맹정진을 하겠다고 화답했다. 뿐만 아니라 ‘대불조성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참으로 아름다운 불제자다운 모습이 아닐 수 없다.

오늘날처럼 온 사회가 갖가지 참담한 갈등구조를 운허하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는 여기 한국불교의 구세(救世)의 지력까지 감지하게 된다.

이번 대불조성 갈등은 이전의 조계종 종관다툼식 수준이하의 것이 아니었음도 지적하고 싶다. 시대는 진보를 요구하게 마련이고 진보에는 아픔이 따른다. ‘청동대불’ 갈등은 그런 아픔이었으며 불교계는 이를 수습한 부처님 가르침에 따라 지유중이다. 진일보한 종단의 거듭남에 새삼 기대를 걸고자 한다. 그래도 남은 문제라면 고질적 병폐인 ‘폭력’이다. 승단의 폭력은 어떤 이유에서건 용납될 수 없는 일이다. 이번 일을 계기로 종단의 뿌리깊은 병폐인 폭력성이 확실히 근절되기를 바란다.

화합 없는 종단에 부처님이 머무실 리 없다. 이번 사태를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 교계에 더욱 화합하는 풍토가 조성되기를 기대한다.

문화재 중요성 인식 새롭게

흔히들 21세기를 문화의 세기라 일컫는다. 하지만 김대중 정권이 들어서면서 정부 조직 개편에서도 볼 수 있듯, 문화재에 대해서는 경제논리 즉 관광 상품으로만 본 측면이 짙다. ‘문화관광부’라는 이름이 단적인 예다. 문화와 관광은 결코 동격될 수 없다. 세계화 시대에 더욱 요구되는 문화의 고유성과 독자성이 빛을 발할 때, 저절로 생겨나는 부가가치가 상품으로서의 관광이다.

그러나 현 정부는 골목 없는 산업으로서의 관광에 초점을 두고 문화재 정책을 입안했다. 최근 추경 예산에서 불교 문화재 일제 조사 예산 전액 삭감만으로도 알 수 있는 사실이다. 우리 민족이 남긴 역사와 ‘살의 지문’으로의 문화재가 지닌 가치를 간과한 것이다.

뒤늦기는 했지만 참으로 다행스럽게도 경찰청은, ‘우리 문화재 지킴이’라는 이름으로 분청과 14개 지방 경찰청, 230개 경찰서별로 1명씩 모두 245명으로 구성된 문화재 전담 수사팀을 가동시킨다고 한다. 이는 정부

가 문화재 보존 의지를 구체화시켰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크지만, 그 동안 조계종에서 즐기치게 주장해온 문화재 전담 수사반 설치가 받아들여졌다는 점에서도 고무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때마침 문화재청도 현재 2명인 사법단속반을 5명으로 늘려 줄 것을 행정자치부에 요구해 놓은 상태다. 문화재 정책에 대한 전향적인 발상으로 받아들이고 싶은 대목이다. 앞으로 조계종에서도 이 일을 요구의 관철로 여길 것이 아니라, 정부와 동반자적 관계에서 문화재 정책의 효율성을 높일 합리적인 조언과 제안을 하는 일에 더욱 세심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이번 경찰청의 문화재 사법 단속 전담반 발족은, 사건 발생시 초동수사나 범죄 예방 차원에서도 크게 환영할 만한 조치가 아닐 수 없다. 덧붙여 한번 더 강조하고 싶은 점은, 문화재 단속의 유형은 역사적 유물이 아니라 민족의 얼과 삶이 아로새겨진 한민족 정체성의 지문이라는 사실이다.

“문화재 보호인력 늘려라”

문화재청 2명이 전국담당... 조계종 “5명 증원” 요청

5-6월 문화재절도 6건

최근 두 달 동안 불교문화재 도난사건이 6건이나 발생하는 등 문화재 도난 사건이 잇따르면서 문화재청 사법단속반의 인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조계종 총무원회는 계속해 발생하고 있는 불교문화재 도난사건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면서 현재 2명뿐인 문화재청의 사법단속반 인원을 5명으로 늘려줄 것을 행정자치부에 요청할 방침이라고 4일 밝혔다.

총무원 기획실 박희승 과장은 “2명인 사법단속반 인원으로 전국적으로 활동하는 문화재사범을 수사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며, 사찰 소장 문화재의 보호를 위해 사법단속반 인원을 최소 5명 이상으로 늘리고 검찰과 경찰

에도 문화재전담반을 설치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조만간 행정자치부와 이 문제를 협의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조계종은 지난 5월 발표한 ‘불교문화재 보존 및 도난방지 대책’에서도 이 같은 내용을 정부에 요청한 바 있다.

문화재청 역시 이에 공감하는 분위기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어느 분야보다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인 만큼 따로 부서를 독립시켜 일단 전담해 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지금처럼 여러 업무를 함께 보는 상황에서 효율적인 문화재사범 단속과 예방을 기대한다는 건 힘들다”는 입장이다. 이미 문화재청은 사법단속반 인원을 2명에서 5명으로 늘리는 내용을 포함해 현행 2국 7과 체제에서 3국 11과로 조직을 확대하는 개편안을 5월 26일 행정자치부에 제출

했다.

그러나 행정자치부는 “총원 자체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라며 사법단속반 인원 확대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한 관계자는 “97년부터 진행되고 있는 정부 구조조정에 따라 인원과 예산을 늘리는 것은 솔직히 어렵다”며 “그보다는 자체 인력을 재배치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으면 한다”고 밝혔다.

1971년 처음 생긴 사법단속반은 담당인력이 한 때 9~11명에 이르렀으나 1980년 3명을 유지하다가 1986년 이후 2명이 전국을 담당하고 있다. 조계종 총무원 자료에 따르면 84년부터 99년 6월까지 발생한 불교문화재 도난건수는 316건 453점에 이른다. 회수율은 5% 미만에 불과한 실정이다.

권형진 기자

남북종교인회의 추진

6·15 실천추진본부-내달 청소년 평화순례도

6·15남북공동선언실천을 위한 2001민족공동행사 추진본부가 8·15 남북공동행사의 일환으로 남북종교인회의와 7대 종단 청소년 평화순례를 추진한다.

민족공동행사 추진본부는 이달 23일부터 26일까지 남북종교인회의를, 8월5일부터 9일까지 7대 종교 평화순례를 개최하는 안을 최근 확정하고, 북한과의 실무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장소 및 일정을 확정키로 했다. 민족공동행사 추

진본부는 이달 중순경 남북공동회담실무대표자 회의를 갖자는 제안을 이미 북한 쪽에 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족공동행사 추진본부가 마련한 계획안에 따르면 남북종교인회의의 경우 70~90명이 참가하는 규모로 민족화해시대의 새로운 진로모색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7대종단 청소년 평화순례는 한라산과 백두산에서 진행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한명우 기자

‘대불조성’ 공개토론회 갖자

중신회 해인사에 제의

조계종 중앙신도회는 해인사 청동대불 건립과 관련, 3일 해인사에 공문을 보내 이 문제에 대한 공개토론회를 제안했다.

중앙신도회는 지난 3일 교계 기자 간담회에서 현재 해인사에서 추진 중인 불사의 내용과 방향이 법보종찰의 위상과 재가불자 실행 여건 조성이라는 불사의 취지에 걸맞는 지에 대해 해인사와 관계 전문가, 사부대중이 참여하는 공개토론회를 열 것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이 공개토론회는 11일로 예정돼 있는 불사문화 점검과 바

람직한 방향 모색을 위한 토론회와는 별개다.

이에 앞서 중앙신도회는 6월 30일 조계사 문화교육관에서 30여 중앙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1차 중앙위원회’를 개최하고 새 회장 선출을 위한 대의원회의를 11월 17일 조계사 불교회관에서 갖기로 하는 한편 중앙위원회 9인으로 구성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했다.

중앙신도회는 또 상설위원회로 성보문화재 애호위원회’를 설치하고 성보문화재와 관련한 조사 및 안내, 보존 활동을 펼쳐나가기로 했다. 한명우 기자

현대만평

박구원



시원한 해법으로...

불교의식 집전교육

조계종 포교원 19~20일

직장직능단체 임원을 대상으로 의식집전교육이 처음 실시된다. 조계종 포교원은 19일 오후 8시부터 20일 오후 9시 30분까지 포교원 4층 강의실에서 <불교의식의 이해와 바람직한 집전 방법>을 교재로 의식집전교육을 개최한다.

이번 교육은 포교원이 서울 직장직능단체의 법회 활성화와 안정적인 법회 진행을 위해 마련된 것으로 서울, 경기지역에서 활동하는 단체의 임원과 회원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오종욱 기자

진각복지재단 이사

혜정대정사 선임



사회복지법인 진각복지재단은 6월 28일 임시 이사회를 개최하고 임기 만료된 혜정대정사, 해인 대정사, 박종태, 손성삼, 김영일 이사를 재선임하는 한편 박철원 이사의 임기 만료에 따른 후임 이사로 혜정 대정사(교육원장)를 선임했다. 이경숙 기자

민영교도소 운영비 정부가 낸다

기획예산처 발표

7월1일 민영교도소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민영교도소 설치 및 교정업무의 민간위탁이 가능해지면서 정부가 교도소 운영 경비 등 필요한 부분을 지원한다. 기획예산처는 교도소 부지확보와 건물신축은 민간 부담으로 하되, 교도소 운영의 부실 및 수용자 인권침해 방지와 적절한 수용자 처우수준의 유지 등 교도소 운영

에 필요한 운영경비를 지원한다는 내용의 ‘민영교도소 설치 및 운영을 위한 예산지원’ 계획을 3일 발표했다.

계획안은 교정시설의 과밀수용을 해소하고 인간의 탄력적인 교화프로그램의 도입을 위해 법무부가 추진하는 민영교도소의 운영경비에 대해 현행 운영경비 수준 등을 감안해 필요한 예산을 지원한다고 밝히고 있다. 한명우 기자

본사 인터넷 백화점 www.mahamall.co.kr

3년 연속 e-Trust 인증업체

불교계 최대규모의 전문 인터넷 백화점 마하몰(www.mahamall.co.kr)이 정부 산하기관인 한국전자거래진흥원과 동아일보사, 한국경제신문사, 전자신문사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수상업체는 1년동안 eTrust 인증마크를 해당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할 수 있다. 한명우 기자

eTrust 인증업체로 마하몰과 영풍문고인터넷, 매뉴얼, 현주인터넷쇼핑몰 등 10개 업체를 선정, 3일 발표했다. eTrust 인증은 매일 우수 쇼핑물을 대상으로 수여되며, 수상업체는 1년동안 eTrust 인증마크를 해당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할 수 있다. 한명우 기자

천태종 12대 종회의원

문덕·도원스님 선출



천태종은 최근 문덕스님(종정사 서실장)과 도원스님(부산 삼광사 주지)을 제12대 종회의원으로 임명했다. 문덕·도원 스님은 6월 16일 종정 도용스님으로부터 제 12대 종회의원 임명장을 받았다. 이경숙 기자

목조각에 혼이 깃든 작품만을 공급하는

성불 조각원



문의 033)263-1102 H-P 017)379-0590

최고의 작품만을 최저의 가격으로 공급하는 불자기업 성불조각원